

임박한 발전소 폐쇄, 폐쇄 이전 국가 책임 직접고용이 시급하다

조건희 상임활동가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시스템은 현장의 위험을 개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면죄부로 작동하고 있었다. 고 김충현 노동자와 그의 동료들은 위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도 무시당했고, 그 결과 위험은 더욱 가려지며 전가되고 있었다. 아무도 2차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을 책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본격 폐쇄라는 흐름이 더해졌다. 음지화된 위험을 감내하고 있던 2차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와 생계 위협을 가장 전면에서 마주하고 있다.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2025년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본격 폐쇄 된다면, 그 이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완료하여 폐쇄 이후에도 고용과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전소 폐쇄 흐름 속 방 치된 김충현의 동료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관련 전망과 고민을 알리고 있다.

발전소 폐쇄와 고용불안이 만나면 생기는 일

김충현의 동료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 태안화력발전소 1~4, 7~10호기의 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원청 서부발전의 1차 하청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1년 단위로 업체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재계약 구조는 십여 년 넘게 지속·반복되었다. 한편에선 업체는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계약 시즌이 되면 ‘어떻게 되나 혹시 잘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조합원 1)은 여전히 실재하고 있다. 그 와중에 발전소 폐쇄를 마주한 조합원들은 해고 불안을 더욱 크게, 더욱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 2025.07.21. 발전소 폐쇄 이전 충고용보장이 확립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사진 : 김충현 대책위

“재계약 될 때마다 불안했죠. 솔직히 업체가 올 때마다 엄청 불안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더 그렇죠. 지금은 발전소 폐쇄된단니까. 진짜 누가 잘릴지 모르니까 진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집에서도 걱정하고.”(조합원 2)

“곧 폐쇄도 하나까. 저희도 느끼긴 느끼는데 그래도 어떻게 누가 잘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참 애매해요. 그렇다고 누구보고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조합원 3)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가 2025년 12월에 폐쇄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해당 호기의 폐쇄가 곧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대상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였다. 원청 서부발전·1차 하청 한전KPS·2차 하청업체 모두 고용대책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폐쇄로 촉발된 고용불안은 각자의 눈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서로 눈치만 보는 거야. 누가 먼저 나가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같이 일했던 사람끼리 싸움 붙이는 거.”(조합원 4)라는 이야기처럼, 잔인한 의자 뺏기 싸움은 2차 하청 노동자들이 마주한 공통의 불안이었다.

“KPS에서 물량을 안 주거나 그러면 저희는 그냥 자연 감소하는 거죠. 전에 계약금이 10억이었는데 한 호기 줄인다고 해서 8억이 됐어요. 그럼 8억 갖다가 나눠 먹어야 해. 누가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야. 내 살 깎아 먹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조합원 5)

“그렇게 뭐 심하게 표현을 못 해도 다들 그런 감정을 느끼죠. 내가 아니길 바란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조합원 6)

개별적인 자구책 모색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대책은 전무했고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었다. 이직을 대비한 자격증이 한때 대안으로 얘기되기도 했다. “회사가 없어진다, 없어지면 누구부터 자를 것 같냐, 그런 거(자격증) 없는 사람부터 자를 거다, 이런 얘기가 서로 은연중에 오고 간”(조합원 7) 적도 있었다. 실제로 취득한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은 개별 자격증이 폐쇄 국면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점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자격증 따서 알아서 찾아가라는 그런 식이잖아요. (중략) 그게 뭘 소용이예요? 그게 여기를 떠나라는 소리죠. 지금 터전을 여기에 잡았는데, 먹고 사는 것도, 벌써 애들도 지금 여기서 다 태어났는데.”라는 조합원 8의 이야기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폐쇄 이후 생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민은 다양했다. 타 회사 구직 공고를 찾아본 사람도, 자영업 등 발전소와는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고민한 사람도, 폐쇄 이후에도 다른 경사 정비 업체로 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가족을 구성하고 생활을 함께한 태안이란 지역에서, 현재의 급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려운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 당장 잘리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다른 일자리 등 개별적인 자구책을 찾아보지만 잘 안되고 막막한 마음은 다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국가가 책임지는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폐쇄에 따른 총체적인 불안감을 없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가가 책임지는 정규직화다. 노동자들도 이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동시에 “되면 좋겠지만 너무 큰 욕심”(조합원 9), “그 사람들(한전KPS)이 아니꼬운 시선으로 (우릴) 볼 수밖에 없죠.”(조합원 10) 등 정규직화 이후의 우려와 회의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재계약을 반복하게 했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유도한 결과기도 하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대량 폐쇄라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 상황은, 정규직화에 대한 열망으로 긴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폐쇄 전까지는 (정규직화가) 돼야... 그 후엔 만약에 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 회사에서도 이미 구조적으로 조정을 한 상태에서 저희를 받아들여게 되면 이거는 뿔뿔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되어야 원청에서도, 아니면 KPS에서도 저희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합원 11의 이야기가 무게를 와닿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5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의 본격적인 폐쇄에 앞서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책임져야 한다. 석탄발전소는 멈춰도 노동자의 삶은 멈출 수 없기에 모든 발전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